

기사입력날짜 : 2001 년 06 월 12 일

참세상 뉴스센터 chamnews.jinbo.net



http://news.jinbo.net

2001년 10월 6일

상세검색 | 기사검색

독자게시판

주요 | 과학 & 정보통신 | 사회 |

@ 정보통신/인권하루소식

'자퇴생 모임', 온라인에서 퇴학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건전 정보 단속'을 위해 '전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연말에 2곳의 사이트를 폐쇄했다.

출처: 인권하루소식

'자퇴생 모임', 온라인에서 퇴학
'음란' 사진 논란, 교사 사이트도 폐쇄

"이 사이트는 학교라는 존재를 철저히 비판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 자퇴나 가출을 긍정적으로 표현하여 이를 유도하는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심히 우려되는 바 이용해지를 심의 의결함."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건전 정보 단속'을 위해 '전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연말에 2곳의 사이트를 폐쇄했다.

자퇴생들의 온라인 모임인 아이노스쿨넷(Inoschool.net, 아래 노스쿨 사이트)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 15일 폐쇄를 결정했다. 노스쿨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 불온통신 조항 중 3항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는 것. 결국 노스쿨 사이트는 지난 8일 일방적으로 폐쇄됐다.

정보통신윤리위 사무국 유호경 심의조정부장은 "노스쿨 사이트에 학교를 그만두는 방법, 부모님께 자퇴 허락을 얻는 방법 등의 글이 올라가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부연했다.

노스쿨 사이트 운영자 김진혁 씨는 사이트가 폐쇄된 직후 정보통신윤리위 게시판에 항의글을 올렸다. "학교를 비판하였다고 폐쇄한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라며, "노스쿨은 불건전한 정보문화를 확산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어 "시정할 시간을 주지 않고 즉각폐쇄를 결정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비판하고, "폐쇄조치는 '학교 밖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고정관념에서 결정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 부장에 따르면 노스쿨 사이트 개설목적은 △학교 밖의 사람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학교라는 존재를 비판하며 △이 세상에서 자퇴생을 보는 편견을 극복하여 △우리보다 어린 사람들이 학교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다. 즉, 노스쿨 사이트의 개설목적은 '자퇴나 가출을 유도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또한 노스쿨은

"오로지 자퇴를 하려는 사람이 의견을 나누고 자퇴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것"이라며, "자퇴는 자신의 뜻"이며 "자퇴하라고 외치지 말아 달라"고 밝히고 있다고 윤 부장은 밝혔다.

'나체사진' 사이트도 폐쇄

노스쿨 사이트 폐쇄에 앞서 7일에는 정보통신윤리의 권고에 따라 김인규(39, 충남 서천 비인중학교) 교사 개인사이트의 초기화면이 삭제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한 상임전문위원이 자의적으로 음란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김 교사 사이트에 있는 '나체사진'이 전문가들의 검토 및 문화예술단체들의 주장을 통해 음란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검증됐다"며 "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진행중임을 고려한다면 정보통신윤리위의 자의적 판단 및 삭제요청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윤리위가 노스쿨, 김인규 교사 사이트 폐쇄의 근거로 삼은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불온통신' 규정. 민족예술인총연합은 12일 논평을 통해 "미술교사 김인규 씨 사이트 폐쇄는 '민원이 너무 많다'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이는 국가가 행정적 차원에서 예술가 개인의 작품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추상적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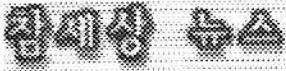
민예총은 이어 "이런 논리가 낳은 행정적 폐단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문화예술의 위축을 가져와 사회발전을 심각히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예총은 또 "정보통신윤리위가 홈페이지를 폐쇄하면서 제시한 '불온'은 누가 보아도 자의적"이라며 "이런 잣대를 적용한다면 어떤 사이트든 살아 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지법 홍성지원 김재환 판사는 12일 김인규 교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증거가 이미 확보됐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최기원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음란성 논란의 소지가 많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공판과정에서 사실 유무를 밝힐 수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사입력날짜 : 2001 년 06 월 13 일

참세상 뉴스센터 chamnews.jinbo.net



상세검색 | 기사검색

독자게시판

http://news.jinbo.net

도움 | 新聞 | 정보통신 | 新聞 | 新聞

2001년 10월 6일

@ 정보통신

동성애사이트에 첼조망을 치다! (정보통신윤리위 방문보고)

6월 20일, 끼리끼리, 동인련, 평화인권연대를 비롯한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활동가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12만여 건에 이르는 '차단 목록'의 '일부'를 열람했다. 이 '차단 목록'은 각 업체의 소프트웨어에 장착되고 PC방, 공공도서관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이 '목록'에 오른 사이트는 인터넷에서 차단, 격리되는 셈이다.

출처: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우현주(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 모임 '끼리끼리' 회원)

6월 20일, 끼리끼리, 동인련, 평화인권연대를 비롯한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활동가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12만여 건에 이르는 '차단 목록'의 '일부'를 열람했다. 이 '차단목록'은 각 업체의 소프트웨어에 장착되고 PC방, 공공도서관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이 '목록'에 오른 사이트는 인터넷에서 차단, 격리되는 셈이다.

'차단등급' 부여과정은 해당사이트를 찾아오는 기술적 경로 그리고 이에 일일이 등급을 부여하는 과정으로 나뉜다. 포르노 사이트에 링크된 사이트들을 기계가 자동으로 긁어 오면 3명의 모니터(아르바이트)들이 '노출, 섹스, 혐오, 퇴폐, 폭력, 사행, 불법'의 등급기준으로 나누고 그 정도를 표기한다. 윤리위원회는 차단 목록의 99%가 '포르노'이고 '음란물'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단지 3명이 하루에 3백여건 씩 처리하다보니 자의적이고 포괄적인 차단이 이루어진다. '아르바이트'의 고정관념에 어긋나면 차단되는 것.

자의적으로 '차단' 여부 결정

동성애 관련 사이트들은 b, c, g(노출, 성, 퇴폐) 범주에서 2, 3, 4등급으로 고루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나마 약하게 분류된 g-2등급에는 인권운동 사이트, 동성애자 뉴스 사이트도 속해 있었으며 b, c-4등급으로 분류된 사이트 중에는 여행안내 사이트, 각종 생활정보를 주는 사이트, 동성애관련 지역정보(gaytoronto, gayvancouver) 사이트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클린턴도 표지인물로 등장했던 '가장 진지하고 엄숙한 동성애 잡지(advocate.com),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동성애자 인권운동 네트워크(ilga.org)도 차단대상이다. 동성애자들은 뉴스를 공유해도 안되고 자신들의 인권을 보장받기 사이트를 만들어도 '퇴폐 등급'에 의해 세계에서 차단된다.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권리도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것일까? 결국 이 목록에 들어 있는 동성애 사이트들은 그저 '동성애' 사이트이기 때문에 포함된 것이다. '진짜

차단되어야 하는 사이트'에 '링크돼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에 뜬 광고가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동성애 사이트들이 차단목록에 오르게 된다. 광고가 잘못되었으면 그 광고를 낸 쪽에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고, 링크시킨 사이트가 잘못되었으면 그 사이트와 해결을 봐야지 왜 멀쩡한 사이트를 목록에 올려놓고 퇴폐네, 음란이네 하느냐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는 '동성애자=변태, 동성애=비정상적, 퇴폐적'이라는 고정관념을 충실히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등급을 부여받은 해외 동성애 인권운동 사이트나 뉴스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당신들의 사이트가 퇴폐 사이트로 분류되었습니다. 당신들의 사이트는 한국 네티즌은 도저히 접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라고 서신을 보내고 싶은 심정이다.

기사입력날짜 : 2001 년 06 월 26 일

정우혁 patcha@patcha.jinbo.net



상세검색 | 기사검색

독자게시판

http://news.jinbo.net

노량 | 과학 & 정보통신 | 사회 | 문화

2001년 10월 6일

@ 정보통신

통신질서확립법 시행에 반대하는 행동 잇달아

이에 반대하는 네티즌 및 사회단체들은 온라인상에서의 반대행동을 준비했고, 6월 29일부터는 사이트파업과 온라인 시위에 들어갔다. 사이트파업에 참가한 사이트는 30일 현재 사회,노동단체 및 문화관련 사이트 등 380여곳에 이르고 있으며 참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출처: 인터넷녹두신문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200131	【국회】 정보통신법 개정안 통과	2001-06-29	4
200132	【국회】 인터넷이 내건다! 온라인시위를 보장하라	2001-06-29	8
200133	【국회】 인터넷이 내건다! 온라인시위를 보장하라	2001-06-29	1
200134	【국회】 인터넷이 내건다! 온라인시위를 보장하라	2001-06-29	4
200135	【국회】 인터넷이 내건다! 온라인시위를 보장하라	2001-06-29	1
200136	【국회】 인터넷이 내건다! 온라인시위를 보장하라	2001-06-29	5
200137	【국회】 인터넷이 내건다! 온라인시위를 보장하라	2001-06-29	8
200138	【국회】 인터넷이 내건다! 온라인시위를 보장하라	2001-06-29	12
200139	【국회】 인터넷이 내건다! 온라인시위를 보장하라	2001-06-29	12
200140	【국회】 인터넷이 내건다! 온라인시위를 보장하라	2001-06-29	24
200141	【국회】 인터넷이 내건다! 온라인시위를 보장하라	2001-06-29	4
200142	【국회】 인터넷이 내건다! 온라인시위를 보장하라	2001-06-29	1
200143	【국회】 인터넷이 내건다! 온라인시위를 보장하라	2001-06-29	5
200144	【국회】 인터넷이 내건다! 온라인시위를 보장하라	2001-06-29	8
200145	【국회】 인터넷이 내건다! 온라인시위를 보장하라	2001-06-29	1
200146	【국회】 인터넷이 내건다! 온라인시위를 보장하라	2001-06-29	16
200147	【국회】 인터넷이 내건다! 온라인시위를 보장하라	2001-06-29	3

통신질서확립법 시행에 반대하는 행동 잇달아

해외 진보적 활동가들도 연대메시지 보내

그동안 네티즌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왔던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려 하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네티즌 및 사회단체들은 온라인상에서의 반대행동을 준비했고, 6월 29일부터는 사이트파업과 온라인 시위에 들어갔다. 사이트파업에 참가한 사이트는 30일 현재 사회,노동단체 및 문화관련 사이트 등 380여곳에 이르고 있으며 참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 이들은 29일 정오부터 통신질서확립법 시행을 반대하는 대규모 온라인시위를 청와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트에서 진행했다.

각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구호와 반대입장을 담은 글을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 온라인 시위에는 문화개혁시민연대의 강내희교수,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 등이 투쟁사 및 연대사의 글을 보내어 네티즌들의 시위에 힘을 보탤다.

특히 GNU의 창시자이자 카피레프트 운동가인 리처드스톨만은 "(국가에 의한) 검열 법안은 그동안 포르노그래피가 위험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민주주의 사회에 위험요소가 된다"며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미국 페이퍼타이거TV 활동가들도 "한국 인터넷 등급제와 검열에 저항하는 한국 활동가들에게 깊은 연대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해외각지의 진보적 활동가들이 한국의 투쟁을 지지연대하겠다고 밝혔다.

7월 2일 사이트파업을 처음 제안하고 주도했던 검열반대공동행동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이트 파업은 전면 파업에서 부분 파업까지, 큰 규모의 단체에서 작은 규모의 단체까지, 커뮤니티에서 개인 사이트까지,참가폭과 방법은 다양했다"고 밝혔으며 "이것은 이번 사이트 파업이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과 모두가 함께한 '투쟁'이었으며 많은 이들이 인터넷의 자유를 갈망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공동행동은 지속적으로 인터넷등급제 불복종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출정식 및 가두시위 발언모음

강내희 (문화연대 정책기획위원장 / 중앙대 영문학과 교수)

나는 한 시민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령에 반대한다. 이 법령은 내가 문명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 그리고 이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게 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도대체 어떤 권한으로 내 표현의 자유를 멋대로 짓밟으려 하는가? 시민이자 인간인 나에게 표현의 자유는 정부 기관이 적당히 제재해도 좋은 하찮은 권리가 아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권리요, 따라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다. 인터넷등급제도 시행으로 나의 이 시민적, 인간적 권리는 무시로 짓이겨지고 짓밟혀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이번 전기통신기반보호법의 발효로 앞으로는 온라인시위가 불법으로 내몰린다고 한다. 분노가 치솟아 오른다.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문명 사회에서 시위 자체를 불법으로 모는 곳이 있다는 말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온라인 시위를 한다는 것 자체로 불법으로 만들다니, 이 법안은 악법이다.

나는 인간의 존엄과 시민의 권리, 그리고 문명 사회의 이름으로 이 법에 반대한다.

정부는 인터넷내용등급제도를 철회하고 시위의 자유를 봉쇄하는 만행을 중단하

라!

리차드 스톨만 (GNU 창시자 / 카피레프트 운동가)

허위 허식의 굴레를 쫓고 있는 한국 정부는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에 대한 검열 시
행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라는 관점에서 등급제 논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르노그래피 (여기에서는 유해정보로서 포르노그래피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
니다.)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에게 심각하고 신중한 조언을 해주는 사이트까지
도 폐쇄될 수 있는 사이트 목록에 포함됩니다. 정부의 이런 논리에 속지 마십시
오. (국가에 의한) 검열 법안은 그동안 포르노그래피가 위험했었던 것보다도 훨
씬 더 민주주의 사회에 위험요소가 됩니다.

The Korean government, following a deceitful chain of events, is using the
excuse of "protecting minors" to impose filtering on the Internet. The list of
sites to be blocked includes not only pornography (not that pornography
is a bad thing), but also sites that provide serious advice to gay people.
Don't be fooled by the excuse. Censorship laws are more dangerous to a
democratic society than any pornography could ever be.

Richard Stallman

평화인권연대

안녕하십니까.

평화인권연대의 앤입니다.

저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말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은 다른 미디어와 달리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말을 전하는데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자신의 말을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도 이러한 수단을 독점하고 있지 않기에 더욱 널리 접근할 수 있습니
다. 자신을 대신해서 말해주기를 바랄 필요가 없이 자신이 직접 말하고 내 이야기
를 들어줄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하기에 권력을 쥐고 있지 않은 많은 이들, 소통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들은 인터넷을 빌려 자신의 말을 전하고, 동조해줄수 있는 이들을 찾는 것입니다.

특히,현실공간에서 이러한 일을 드러내기에는 부담스럽거나 다른 이들의 눈을 의
식해야만 하는 이들에게 인터넷은 훌륭한 소통공간이라 생각합니다.자신을 드러
내지 않고도 자신의 말을 전할 수 있기에 말입니다. 물론, 익명성의 해악도 많다
고 생각합니다.이는 폭력의 형태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익명의 폭력은 익명을 들춰내려는 이들, 실명의 폭력을 행하는 이들
에게 더 위협적이라 생각합니다.익명의 폭력이 사회적 소수자에게 돌려질때 이는
익명이라서가 아니라 현실적 폭력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게시판이 실명화되고 있는데 이는 내용등급제와 전혀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내용등급제는 국가가 행하는, 기득권이 행하는 사실상의 폭력입니다.

청소년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청소년의 눈과 입을 가리기 위한 것에 다름아니며 이는 다른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같은 것만을 강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를 드러내서 니가 가지고 있는 다른점을 책임지라는 거죠..왜 너는 다른 점을 가지고 있냐를 캐물으려고 하는 것이죠..이는 내용등급제의 시행에서 드러날 것입니다.이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구축한 DB에는 수 많은 동성애사이트가 차단되고 있습니다.이미 많은 성적 표현물 사이트, 안티사이트들이 정통윤의 심의 하에 차단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것을 강요하고자 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 생각합니다.동일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인터넷을 통해 드러나게 될때 미쳐 날뛰는 기득권의 반격이라 생각합니다.인터넷은 그런 점에서 현실의 반영이고, 현실의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어 줍니다.

저는 전쟁을 준비하는 영화보다 벗은 남녀의 교감을 담은 영화가 차라리 평화적 이라고 생각합니다.저는 자살하게 만드는 사회적 현실보다 자살사이트에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인터넷 현실이 더욱 인간적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한 점에서 동일한 것을 강요하는 정통윤의 폭력이야말로 폭력중에서도 가장 강한 폭력입니다.

말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구호로서 정리하겠습니다.

폭력 4등급/ 혐오 3등급/ 엽기윤리위는/ 자폭하라!!

청소년 개인정보절도/ 방치하는/ 정통부는/ 제정신이나/알아서/자폭하라!!

권리없는/청소년보호/기만이자/폭력이다/정보위는 자폭하라!!!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자유로운 생각과 목소리는 인간다운 생존을 추구하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억눌린 생각과 목소리로는 인간다운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과 맞설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으며, 생각을 바꿀 자유도 있으며, 혼자서 또는 여럿이 함께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매체를 통해 자유로운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을 때 자유로운 생각과 목소리는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평화롭게 집회를 열고 단체를 만들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 온라인상에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권리를 포기할 때 그 결과는 '불편함'이나 '불쾌함' 정도가 아니라 '나의 인간적 존엄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나의 인간적 존엄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이 땅의 동성애자들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국가 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줄지에 퇴폐

2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이는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과 함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만든 불건전 사이트 선정기준에 의한 것이다.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간의 '성적지향'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을 인권침해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법시행령과 이번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따른 등급기준에서 동성애를 음란과 퇴폐로 규정하는 것은 동성애자의 평등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이다. 당국에서 말하는 인터넷에서의 음란함과 불건전함의 선정 기준은 보수적 이성애 질서를 강제함으로써 억압받는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성적지향의 문제를 질병 혹은 문제 행동의 범주에서 논의하거나 이성애적 윤리 질서 속에서 판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음란퇴폐로 규정해 검열하고 차단하겠다는 의도는 무엇인가? 다양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인간 누구나가!

시민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동성애자들은 오랜 세월 시민적 권리가 박탈되어 왔다. 이러한 무권리 상태에서 신음해 온 이유는 성적소수자에 대한 근거없는 편견과 왜곡된 시각 때문이었다. 거기에 '인터넷내용등급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들이 이러한 편견을 더욱 부추기는 억압의 기재로 작용할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성적지향을 인권의 영역에서 보호한다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 검열의 잣대로 이용하는 것은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분열적 가치 기준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정부는 시민의 자유권적 권리인 성적지향을 진정한 인권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 조항들을 폐지하며 '인터넷내용등급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들을 철폐해야 할 것이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적소수자와 다수의 억압받는 민중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이 사회에서 사라질 때까지 감시와 비판의 시각을 놓지 않을 것이며 진정한 표현의 자유와 억압받는 자의 사회정치적 권리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 전체사이트파업 발언모음 보기(검열반대공동행동)

기사입력날짜 : 2001 년 07 월 03 일

참세상 chamnews.jinbo.net



http://news.jinbo.net

2001년 10월 6일

상세검색 | 기사검색

독자게시판

도움 | 과학 & 정보통신 | 사회 |

@ 정보통신/주간노동자의힘

인터넷, 이제는 파업이다!

멕시코 사파티스타의 투쟁엔 인터넷이 있었다. 영국 리버풀 부두노동자 투쟁에도 인터넷은 세계노동자의 지원파업을 이끌어내는데 큰 힘이 되었다. 96·97년 총파업 홈페이지는 전세계에 총파업 소식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출처: 노동자의힘

인터넷, 이제는 파업이다!

멕시코 사파티스타의 투쟁엔 인터넷이 있었다. 영국 리버풀 부두노동자 투쟁에도 인터넷은 세계노동자의 지원파업을 이끌어내는데 큰 힘이 되었다. 96·97년 총파업 홈페이지는 전세계에 총파업 소식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올 4월 대우차 노조원에 대한 경찰의 폭력만행 동영상 역시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퍼져나갔다. 인터넷은 이제 제도권 거대언론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일상 속에 자리잡게 되었고, 투쟁 속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는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올 초 자살사이트를 시작으로 3월엔 징병제 논란 홈페이지를 폐쇄했고, 회원들에 대한 강압수사를 했다. 5월엔 한 중학교 교사를 자신의 예술작품 홈페이지에 실은 부부의 알몸 사진이 음란하다는 이유로 체포했다. 6월에는 자퇴생들의 온라인 모임 '아이노스쿨(www.inoschool.net)'에 대해 단지 '학교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이트 강제폐쇄 조치를 내렸으며, 심지어 개인들이 서로 파일을 주고받는 훈넷(www.hoonnet.com)의 '애니나라'까지도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용해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서곡일 뿐이다. 7월 1일부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통신질서 확립법)'이 발효되는데, 이 법에는 작년 노동자 민중의 저항으로 국회에서 폐기된 '정보내용 등급 자율표시제'가 복구되어 있다. 그러나 인터넷 등급제는 청소년 보호엔 효과가 없다. 단지 인터넷에 국가의 개입을 보장하고 등급표시제를 법으로 정하고 국가 검열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등급기준을 정하는 강제검열 조항이다. 더욱이 9월 발효되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위험소지를 안고 있는 등급보류제와 음란물 사전 차단 프로그램 의무설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인터넷상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게다가 '통신질서확립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온라인 시위'를 불법화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을 이용해서 시위하면 징역 5년,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 10년형까지 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이 법안은 사실상 제2의 국가보안법이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를 주축으로 노동자 민중 단체들은 악법 저지와 인터넷 탄압 저지를 위한 인터넷 연좌시위와 72시간 사이트를 폐쇄하는 인터넷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http://freeonline.or.kr>). 세계 최대의 인터넷 탄압에 맞선 세계 최초의 인터넷 파업과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인터넷 사이트 파업은 7월 5일민주노총 정치총파업과 함께 결합하여, 반김 대중 투쟁을 기치로 가상공간에서 현실공간으로의 연쇄 파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기사입력날짜 : 2001 년 07 월 07 일

참세상 뉴스센터 chamnews.jinbo.net



상세검색 | 기사검색

독자게시판

<http://news.jinbo.net>

주요 | 과학 & 정보통신 | 사회 |

2001년 10월 6일

@ 사회/주간노동자의힘

□ 민중운동 동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일간신문 강제투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조선일보구독거부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출처: 노동자의힘

□ 민중운동 동향 □

민변, 조선일보 구독거부운동 나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일간신문 강제투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조선일보구독거부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민변은 2일 정기집행위원회를 통해 이 같이 결의하고 조선일보의 구독중단을 회원들의 가족과 동료들에게 적극 권유할 것이라고. 또한 7월부터 신문고시가 시행되는 것에 즈음해 일간신문의 강제투입과 기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을 및 신문고시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고발 및 손해청구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 이를 위해 일반시민으로부터 위반 사례를 접수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 및 고발하고 집단적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공익소송의 일환으로 진행할 계획.

전국 곳곳에서 '노동운동탄압 규탄' 시국선언

정부의 민주노총에 대한 강경방침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역에서 노동운동 탄압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잇따라 발표. 3일 전남지역 교사 1,000명이 '김대중 정권의 노동탄압에 대한 전남교사 시국선언'을 발표, 민주노총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항의. 시국선언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보냈던만큼 노동탄압이라는 현 시국이 참담하다며 국민의 정부가 노동자들의 파업의 원인과 과정은 거두절미한 채 국내외 자본의 요구에만 순응하면서, 노동자·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 또 현 정권이 자행하는 노동자 탄압과 잔혹한 폭력행위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올바른 국민의 교사로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소중한 삶을 되찾아주기 위해 단호한 자세로 현 정권의 각성과 반성을 촉구한다고 촉구.

이와 함께 이날 부산지역의 각계각층 인사들도 '민생파탄, 개혁실증, 노동자탄압 규탄 공동시국선언'에 나섰다. 이날 부산지역의 각계각층은 이날 부산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교, 학계·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노동계가 각각 각계의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발표.

경남 시민사회단체, "노동운동 탄압 중단" 촉구

경남지역 44개 시민사회단체가 29일 현 정부의 개혁실종 규탄과 노동운동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시국기자회견, 경남민중연대(준)를 비롯한 노동·종교·의료·여성 등 44개단체는 30일 민주당 경남도지부 앞에서 시국기자회견을 갖고 공안적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 정부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이른바 가혹 이데올로기와 대외신인도 하락을 이유로 공권력 사용을 정당화하고 각종 민생법안과 개혁입법을 사문화시키고 있다고 비난.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면폐기하고 국민의 저항과 개혁요구에 즉각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검거령 철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 △새만금 갯벌 간척사업과 마산만 매립계획 중단 등을 촉구.

300여 사회단체 '온라인 파업'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이 지난 29일부터 전개한 사이트 파업을 2일 낮 12시로 종료하고 이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체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공동행동은 7월1일부로 시행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반대하는 이번 사이트 파업에 500여개의 홈페이지가 참여했으며 공식파업일정을 마감한 지금도 계속 파업을 진행하는 사이트가 늘어가고 있다고. 또한 리차드 스톨만, 국제진보통신연합, 미국의 페이퍼타이거 등 해외 여러 단체와 활동가들이 '사이트 파업'에 대한 지지메시지를 보내거나 배너를 달아 사상 유례없는 한국정부의 '검열'에 함께 연대했다고. 공동행동은 관련법의 시행은 국민의 표현할 권리와 알권리를 자신들의 일방적 기준으로 통제하려는 것이며 '온라인 시위'를 범죄행위로 낙인찍음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특히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경우 위헌소송이 제기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에 의해 설립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온'이라는 자의적 기준으로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공동행동은 앞으로도 인터넷내용등급제 불복총운동을 벌여나가겠다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폐지를 촉구.

기사입력날짜 : 2001 년 07 월 07 일

참세상 뉴스센터 chamnews.jinbo.net



상세검색 | 기사검색

독자게시판

http://news.jinbo.net

보령 | 김천 | 정보통신 | 사회 | 문화

2001년 10월 6일

@ 정보통신

'인터넷내용등급제' 검열대상의 총체적 확장

시행중인 청소년보호법은 전국노동단체연합의 '노동전선' 등 노동·정치·사회적 내용들을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동성애를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 왔다. '인터넷내용등급제'와 청소년보호법이 분리되지 않을 것은 뻔하기 때문에 유해사이트의 근거가 어떠한지는 뻔히 보이는 일이다.

출처: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인터넷내용등급제' 검열대상의 총체적 확장

"엄마, 이상해. 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했는데 엄마가 일하는 곳의 홈페이지가 유해사이트래. 거기 나쁜 곳이야?"
이렇게 자녀들이 물어온다면 뭐라고 말할까.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문제는 인터넷에 가까이 사는 네티즌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노동관련 홈페이지들이 부쩍 늘어났다. 특히 투쟁의 홍보 수단으로서 홈페이지들을 만드는 일은 이제 당연한 일이 되었다. 노동문화단위들도 마찬가지이다. 개인/단체홈페이지를 통해 작품들을 홍보하고 내부 및 외부의 소통의 중요한 통로로 구축되고 있다.

등급을 심의하고 규제하는 기준이 '민간자유'이라고 주장하는 민간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위원장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심의 결과를 정보통신부에 보고해 왔고, 자신들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윤리위는 이에 대한 취급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도록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의해 왔다. 이것은 '민간자유'의 헛소리라는 것을 증명한다.

거기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자의적인 '불온'의 기준을 적용시켜 PC통신과 인터넷에서 규제/삭제시켜왔으며 이러한 삭제/차단하는 검열의 임무를 링크를 검색하는 '로봇'을 사용하고 있다. '로봇'이 과연 예술/문화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시행중인 청소년보호법은 전국노동단체연합의 '노동전선' 등 노동·정치·사회적 내용들을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동성애를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 왔다. '인터넷내용등급제'와 청소년보호법이 분리되지 않을 것은 뻔하기 때문에 유해사이트의 근거가 어떠한지는 뻔히 보이는 일이다.

현재 인터넷내용등급제에서 유해사이트로 분류된 외국사이트들에는 음란성과 무

관한 동성애인권운동단체의 사이트가 포함되어 있어서 벌써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문센터의 홈페이지도 '로봇'의 감찰에 의해 잠시 유해사이트로 분류되었던 일이 최근에 있었다. 실제 유해사이트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해도 '로봇'은 그것을 알 수 없다. 또한 어느 곳에서 우리를 유해사이트로 분류해 놓았을 지도 확인조차 할 수 없다.

이에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400여 인터넷 사이트가 동참하여 '인터넷내용등급제' 철회의 구호를 담은 동일한 인트로화면을 걸고 전면파업과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싸움을 진행했지만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의 싸움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십여년이 넘는 동안 '검열철폐'의 구호로 투쟁했던 우리의 운동이 허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권력이 검열의 칼을 들이미는 공간이 인터넷이지만 대중의 흐름에 따라 출판물과 음반/비디오에 대한 검열이 확장된 것이라는 것밖에 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기사입력날짜 : 2001 년 07 월 09 일

참세상 뉴스센터 chamnews.jinbo.net



상세검색 | 기사검색

독자게시판

<http://news.jinbo.net>

정보통신 | 과학 | 정보통신 | 사회

2001년 10월 6일

@ 정보통신

정통부, 청소년 유해 사이트 폐쇄 결정 두고 시민단체들 강력 반발

전국 1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http://freeonline.or.kr> 은, 지난 24일 정보통신부가 "아이노스쿨 사이트의 내용규제에 대한 이의 신청은 불건전 정보의 억제를 최소 규제의 원칙과 어긋나는 것" 라고 내린 결정에 강력 규탄하고 26일 성명서를 통해 "네티즌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정보통신 윤리위원회는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출처:

[서울 = 참세상뉴스] 이관욱 기자 = 전국 1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http://freeonline.or.kr>) 은, 지난 24일 정보통신부가 "아이노스쿨 사이트의 내용규제에 대한 이의 신청은 불건전 정보의 억제를 최소 규제의 원칙과 어긋나는 것" 라고 내린 결정에 강력 규탄하고 26일 성명서를 통해 "네티즌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정보통신 윤리위원회는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성명서에서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가 자의적으로 근거를 내세우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불온통신의 단속)와 제 53조의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그리고 이에 대한 시행령 제 16조 등 법적 적용과 기준에서 모호성과 절차상의 문제로 이미 위헌성을 지적받아 1999년 부터 위헌소송에 계류중인 법률" 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일반 청소년 학부모, 교사, 네티즌들이 오랫동안 가꾸어온 홈페이지의 폐쇄이유가 심의위원들의 일방적 기준과 자의적 해석으로 짜맞추어진 것"에 다름없다고, 윤리위의 결정을 전면 반박했다.

특히, 공동행동측은 "정통부가 내세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재 기준이 최소한으로 명확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며 무리한 법적용과 이에 남용되는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해 일련의 기준조차 없는 윤리위측의 '통제검열' 의도를 명백히 밝혔다.

이를두고, 윤리위 불법정보팀 관계자는 "이의 신청 접수를 받고 윤리위의 적절한 절차와 심의에 의거 기각 결정을 내린것은 그만큼 이 사이트가 자퇴, 가출의 유도 및 그 부정적 파급효과는 여전히 우려가 전제되기 때문이다" 라며, 공동행동측이 제기하는 결정적인 폐쇄이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에 관한 윤리위의 일방적 결정에 관한 책임성은 회피한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24일 윤리위 결정으로 인해, 아이노 스쿨 사이트엔 각종 항의의 뜻이 담긴 네티즌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misato 아이디의 한 네티즌은 " 시민의 목소리와 바람을 전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 비판도 못하고 희망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라고 말했다.

또, 미트릭 아이디의 네티즌은 " 사회나 어른들의 편견과 선입관으로 포장된 관점과 생각이 아닌 저희 아이노스쿨이 학생들의 쉼터와 10대들의 쉼터가 되고 자퇴생들의 쉼터가 되는 이러한 이점들은 생각하지 못하는것은 우둔하고 고정관념 속에서 의견을 결정 해버린 결과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한편, 이번 윤리위의 결정을 두고, 단순히 불건전 정보, 유해 라는 기준으로, 네티즌들의 공간을 일방적 폐쇄결정하는 것에 대해 '윤리위 폐쇄론' 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은 "한마디로 이번 윤리위의 결정은, 더 이상 국가기관의 검열에 대해 일반 국민, 네티즌으로 하여금 이를 방치해선 안됨을 인식시켜주는 계기" 라며 "더 이상, 올바른 정보문화 라는 미명하에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윤리위의 존립 근거와 명분이 없음을 명확히 드러낸 것" 이라며, 사실상 '윤리위 폐쇄' 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끝) <http://news.jinbo.net> tolerance@jinbo.net



http://news.jinbo.net

2001년 10월 6일

상세검색 | 기사검색

독자게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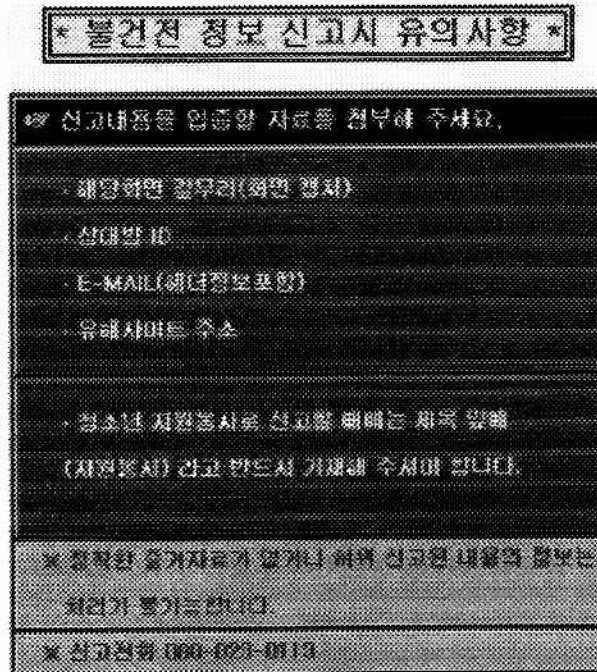
정보통신 | 과학 | 정보통신 | 사회 |

@ 정보통신/참세상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본격적으로 사회단체 공격"

그러나 여전히 남는 의문은 이번 '구국의 소리'게시물의 IP 사업자는 진보넷임에도 진보넷으로 시정공고가 먼저 가지 않았다는 것과 이 게시물의 삭제 권한은 온세통신이나 인터넷 제국에는 없다는 것이다. 온세통신과 인터넷 제국은 인터넷 접속을 가능케 하는 회선 제공자일 뿐이기 때문이다

출처: 참세상뉴스



[사진은 이번 '구국의 소리'게시물에 대한 신고가 들어 왔다는 정보통신 윤리위의 불건전 정보 신고 센터 화면이다.]

'정보통신 윤리위' 진보네트웍스센터의 계속되는 게시물 삭제 거부에 호스팅업체와 회선업체에 삭제요구

진보네트웍스 센터, 8월4일(토) 강남역 정보통신윤리위 앞에서 항의집회 신고내.

지난 8월1일 진보네트웍스센터에서는 진보네트웍스센터의 서버를 호스팅 하고 있는 업체(인터넷 제국)와 회선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온세통신)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정보통신 윤리위원회가 31일 두 업체들에게 진보네트워센터의 홈페이지 (<http://www.jinbo.net>), 진보네트워크가 호스팅하고 있는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홈페이지(<http://www.nodong.net>)와 학생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stunet.jinbo.net>), 그리고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가 호스팅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홈페이지(<http://www.kdip.org>)의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구국의 소리>라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하라는 시정 요구를 이 업체들에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진보네트워센터에서는 "현재 위헌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관련 시행령 제16조(불온통신)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가 그 포괄성과 모호함으로 인하여 명백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27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진보네트워 센터에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욕설"이 올라왔다는 이유로 진보네트워 센터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들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의 공문을 보면 이전과 똑같은 법률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보넷은 이에 대해 "단지 적용 대상이 2월달에는 진보넷이었다면 이번에는 자신들의 요구를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서비스 업체로 선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진보넷의 서버접근을 막고 정통윤에 복종하라는 것이거나 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진보넷의 이러한 주장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 진보넷에서는 이번 시정요구에 대해 "진보넷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그간의 시정요구를 거



부해 왔던 바에 의하면 진보넷 게시판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은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정부 부서적인 성격이 강한 윤리위원회가 삭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그들 업체에게는 법적인 압력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사실상 진보넷의 서버를 막거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에 복종 하라는 것"이라는 것으로 보고있다. 왜냐하면 "해당 정보의 삭제 요구를 받은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는 진보네트워크 서버에 무단으로 침입하기 이전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책임을 벗기 위하여 해당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서버 전체의 이용을 중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회선을 아예 이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해당 서버의 IP주소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기 때문" 이라고 한다.

이렇게 될 경우 몇몇 게시물 때문에 진보네트워크 서버를 통해 운영되는 민주노동·한국여성단체연합·녹색연합 등 500여 사회단체들의 웹사이트, 이들 웹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 전체가 폐쇄당하고 이메일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또한 공교롭게도 민주노동당과 진보넷, 노동넷은 그간 공동행동내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정보통신윤리위와 전면적인 싸움을 해왔던 단체들이며 이들 단체의 자유 게시판에는 각종 정치적인 내용들이 상시적으로 올라온다는 점 때문에 윤리위의

사회단체 길들이기가 아닌가라는 의혹을 살만하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불법 정보팀에서는 "민주노총 자유게시판에도 구국의 소리 게시물이 있는데 왜 민주노총 게시판에 대한 시정요구는 하지 않았느냐?"라는 참세상 뉴스의 질문에 "이번 시정요구는 불건전 정보 신고 센터에 신고가 들어온 사항을 조치한 것이며, 민주노총 게시판에 대한 신고는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진보넷에 시정 요구를 할 경우 2월달과 같이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버티기 때문에 아이노스쿨의 경우처럼 시정요구를 받아 들일 만한 온세통신과 인터넷 제국에 시정요구를 한것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 단지 IP사업자에게 시정 요구를 보낸 것이며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업체의 자율"이며 "이전 아이노 스쿨 폐쇄 역시 시정요구만 한 것이며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업체에서 스스로 사이트를 폐쇄한 경우"라며 "정보 통신 윤리위는 어떠한 강제도 하지 않을 것이며, 할 수 도 없는 기구이므로 업체에 시정 요구만 할 뿐"이라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남는 의문은 이번 '구국의 소리'게시물의 IP 사업자는 진보넷임에도 진보넷으로 시정공고가 먼저 가지 않았다는 것과 이 게시물의 삭제 권한은 온세통신이나 인터넷 제국에는 없다는 것이다. 온세통신과 인터넷 제국은 인터넷 접속을 가능케 하는 회선 제공자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Daum'이 아이노스쿨에 조치한 것처럼 온세통신이나 인터넷 제국이 정보통신 윤리위의 표현에 의한 단지 '시정 권고'를 무리하게 받아들인다면 진보넷에서 호스팅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 녹색연합, 한국 여성단체 연합 등 500여 홈페이지까지 실질적으로 폐쇄가 된다고 한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진보넷은 8월4일(토) 오전 11시에 정보통신 윤리위 앞에 집회신고를 해놓은 상태이다.

아래는 진보넷이 8월2일 정보통신 윤리위에 보낸 공개 질의서 내용이다.

[별첨] 공개질의서

발 신 김진균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수 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참 조 (주)인터넷제국, 온세통신, 한국인터넷 데이터 센터

제 목 시정요구에 대한 질의

1. 귀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이른바 '불온통신'을 행한 자와 그러한 '불온통신'을 통제할 수 있거나 처분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 위원회는 (주)인터넷제국과 온세통신에 본 단체가 관리하는 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2. 이번 귀 위원회의 시정요구의 내용은 '해당 정보의 삭제'이므로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본 단체에 시정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해당 정보'에 대한 어떠한 통제권이나 처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주)인터넷제국과 온세통신에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3. 그런데 귀 위원회가 '해당 정보'에 대한 어떠한 통제권이나 처분권을 갖고 있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것은 사적 검열을 부추기고 자유로운 통신 서비스 이용권 자체를 박탈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정보의 삭제'요구를 받은 (주)인터넷제국과 온세통신은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책임을 벗기 위하여 해당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서버 전체의 이용을 중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회선을 아예 이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해당 서버의 IP주소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 이렇게 될 경우 몇몇 게시물 때문에 본단체 서버를 통해 운영되는 모든 웹사이트, 그 웹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 전체가 폐쇄 당하고 e-mail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5. 귀 위원회는 평소에 자신이 검열기관이 아니며 합리적인 내용규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제는 필수서비스가 된 인터넷접속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자체를 봉쇄하려는 이와 같은 시도가 합리적인 내용규제인지 의문입니다.

6. 이에 귀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합니다.

- 다 음 -

가. (주)인터넷제국과 온세통신에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권'이 있다고 보는지 밝혀 주십시오.

나. (주)인터넷제국과 온세통신에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있다고 보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 (주)인터넷제국과 온세통신에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권'이 없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없다면 (주)인터넷제국과 온세통신에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라. (주)인터넷제국과 온세통신이 귀 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밝혀주십시오. 끝.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김 진 균 (직인생략)

진보네트웍

참세상 뉴스

상세검색 | 기사검색

독자게시판

http://news.jinbo.net

노란 | 과학 | 정보통신 | 사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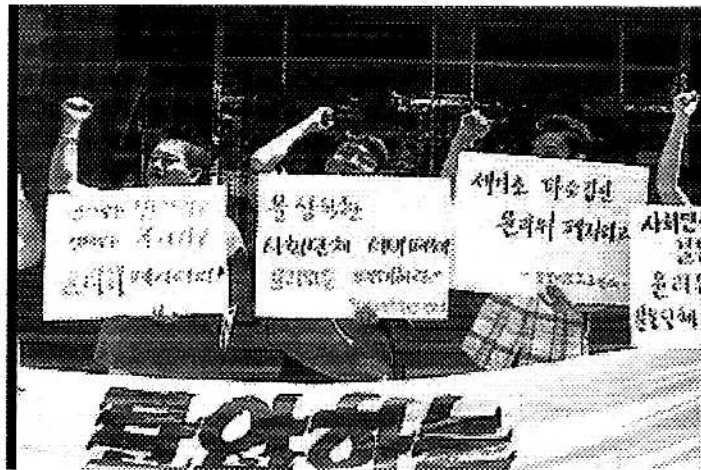
2001년 10월 6일

@ 정보통신/민중기자

"한 놈만 노린다"

앞으로 검열철폐 단체들은 검열없는 사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향후 "한 놈만 노릴 것"이다. 바로 인터넷 검열 포크레인 정통위. 인터넷까지 뺀 검은 그림자를 걸어 내려는 이들의 활동이 더욱 주목되는 시점이다

출처: 정은희 [민중기자]



[8월4일 정보통신 윤리위 앞에서 진보네트웍센터 주최로 항의 집회가 있었다.]

"한 놈만 노린다"

"검열반대단체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 운동에 집중"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제 검열단체로 증명된 만큼 이제 우리는 해체운동에 집중할 것입니다"

오늘 집회 사회를 맡은 오병일 진보네트웍 사무국장이 다부지게 말했다.

진보네트웍, 사회진보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예총 등 검열철폐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오늘 낮 11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위) 앞에서 정통위 해체를 촉구했다.

정통위는 지난 6월 7일 예술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누드를 게재한 김인규 씨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을 폐쇄하도록 해 비판을 받기도 했고, 사회단체 활동을 직접적으로 규제한 것도 처음은 아니지만 이들의 인터넷 검열은 갈수록 위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의 설명대로 게시물 삭제 요구를 받은 인터넷 제국, 온세통신등의 업체들이 정보통신 윤리위의 시정요구를 받아 들이겠다는 마음만 먹었다면 지난 3일 새벽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4개 홈페이지처럼 500여 사회단체의 홈페이지가 동시 할릴 뻔했기 때문이다.



오늘 집회는 이러한 긴장감과 정통위에 대한 극도의 반발 속에서 열렸다. 그러나 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도 휴가는 필요한지라 검열철폐를 주장하는 단체들의 활동가들 중 꽤 많은 인원이 휴가를 떠난 후였기 때문에 오늘 참여한 이들은 생각만큼 많지 않았다. 한 활동가의 말에 따르면 가까운 곳으로 떠난 이들에게 연락하면 금방이라도 달려 왔겠지만 일속에서 겨우 헤어낸 그들을 방해할 수 없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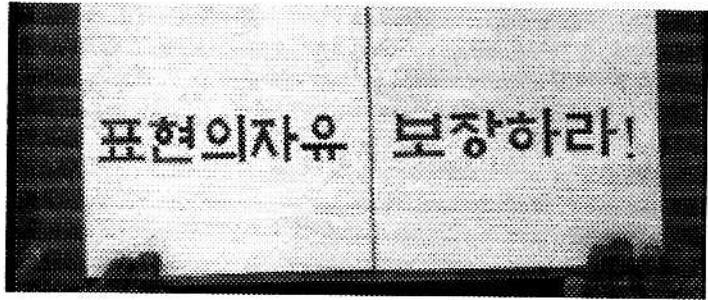
전부해서 19명. 이렇게 적은 인원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피시와 피켓으로 중무장을 하고 정통위 앞에 섰다. 집회는 한국노동네트워크, 동인련, 평화인권연대, 사회진보연대 등의 대표발언으로 이어졌다. 이들 모두는 정통위의 비합리적인 조치와 인터넷 검열에 대해 반발하며 표현의 자유를 요구했고, 앞으로 정통위 해체 운동을 주도적으로 벌어나갈 것이라 결의했다.

이날 집회에서 노동넷 김승만 사무국장은 지난2일 게시물 삭제요구에 대한 문의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는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에로 제보가 들어 왔다"는 말만 했으며 고소에 대한 신빙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단지 "53조 불온통신과 시행령16조를 근거 조항으로한 공문만 보냈다"며 "구국의 소리 게시물은 몇 년전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었고, 자유게시판을 보면 누구나 이 문제에 대해 논의 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데 해당 당사자가 아닌 곳에 일단 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노동넷에 대한 탄압이며 이것은 일단 7월1일 통과된 통신질서 확립법을 통해 온라인상의 재정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 집회에 참가했으며 이번 집회가 일회성 집회가 아니라 향후 더 큰 투쟁을 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오늘 집회는 급하게 조직된 집회라 어느 단체에서 얼마나 참가 할 것인가를 파악



할 수 없었다. 집회가 시작된 후 "인터넷 검열 반대,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라고 적힌 조그만 피켓을 들고 혼자 참가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작년



에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패쇄된 인터넷 방송국 '청춘'에서 온 참가자였다. 그는 "청춘은 작년 10월에 국가보안법과 관련되어 2명이 구속되고 재판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12월30일 정통윤에서 호스팅업체에 취급거부 명령을 내려서 사이트를 폐쇄하였다. 미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윤리위에서 명령을 내려 사이트를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정통윤에 전화를 해 '어떻게 폐쇄를 하게 되었는가?'라고 묻자 윤리위의 대답은 책임회피였다, 또한 자신들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 들였을 뿐이다라는 것이다. 민간기구라는 윤리위가 과연 자율적인 심의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 아니면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인터넷 활동을 막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윤리위가 국가기구임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실장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해석이 가능해 인터넷 통제에 악의적인 수단으로 쓰여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관련 시행령 제 16조(불온통신)도 정통위와 함께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정통위의 조치로 인해 커뮤니티 사이트들에 개설된 동성애자 카페가 연

쇄 폐쇄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동인련 전사무국장은 업체들의 일방적인 게시물 삭제는 오프라인 상에서 남의 집을 침범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밝힌 후 이를 조장하는 정통위의 해체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오후 12시경 다급하게 열린 집회를 정리하며 다음 번에 보다 더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 항의하기로 약속했으며 "사회단체 활동 탄압하는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해체하라"라는 구호로 마감했다.



이후 장여경 정책실장은 업체들에게 시정요구 결정을 내린 정통위의 지난 27차

회의록에 대해 정보
공개청구를 하기 위
하여 정통위를 방문
했으나 그가 들은 대답은 "점심시간에 오는 건 실례아닌가요? 1시 이후에 다시
오십시오".



물론 점심시간에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는 건 그들의 사규와 개인적 배고픔에 실레
되는 행위였을 것. 그러나 정작 게시물이 올려진 웹사이트 주인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웹사이트가 폐
쇄될 수도 있는 상황
에서 게시물을 삭제
하려 한 그들은 자신
들의 조치가 '실례'
이상의 '폭력'이었다
는 것을 알고 있을
까?



자, 앞으로 검열철폐
단체들은 검열없는
사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향후 "한 놈만 노릴 것"이다. 바로 인
터넷 검열 포크레인 정통위. 인터넷까지 뺀 검은 그림자를 걷어내려는 이들의
활동이 더욱 주목되는 시점이다.

기사입력날짜 : 2001 년 08 월 04 일

정은희 foract@hanmail.net



상세검색 | 기사검색

독자게시판

http://news.jinbo.net

포럼 | 과학 | 정보통신 | 사회 |

2001년 10월 6일

@ 사회/주간노동자의힘

민중운동동향[주간노힘]

인권시민사회단체 인사로 구성된 레미콘사태관련 100인위원회가 30일 민주당 김종권 대표를 만나 레미콘 문제에 검찰이 나서지 않는 것은 '여권 실세'가 개입돼 있다고 공식 제기해 파장. 산업자원부 장관 면담 요청, 릴레이 단식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100인 위원회는 '여권 실세 설'이 근거가 있다고 주장.

출처: 주간노동자의힘

□ 민중운동 동향 □

주간 노힘

시민단체 100인위, "레미콘사태 '여권실세 개입설' 근거 있다"

인권시민사회단체 인사로 구성된 레미콘사태관련 100인위원회가 30일 민주당 김종권 대표를 만나 레미콘 문제에 검찰이 나서지 않는 것은 '여권 실세'가 개입돼 있다고 공식 제기해 파장. 산업자원부 장관 면담 요청, 릴레이 단식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100인 위원회는 '여권 실세 설'이 근거가 있다고 주장. 100인 위원회는 유진기업 회장이자 레미콘사용주 단체로 '무소불위'에 힘을 갖고 있는 레미콘연합회 유아무개 회장은 처음부터 조합원들에게 자신이 절대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을 했다고, 100인 위원회는 유회장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 부당노동행위 정도가 심해 검찰에 구속 품신 했다고 밝혔으며 견교부, 환경부, 산자부도 불량레미콘 사실을 인정하는 등 정부부처가 나서는데도 검찰은 움직이지 않았다면서 검찰을 좌지우지 할 만한 힘이 작용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

동성애자차별반대공동행동 발족

동성애자인권연대 등 17개 동성애관련모임은 31일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동성애자차별반대공동행동을 공식발족하고 향후 동성애 차별반대를 위해 활동하겠다고. 이들은 발족선언문에서 "'통신질서확립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동성애를 '퇴폐2등급'으로 분류한 것은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며 "모든 참가단체들은 어떤 검열과 통제에도 반대하며 동성애자에 대한 부당한 억압과 차별이 사라지는 날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고.

또한 △동성애를 퇴폐2등급으로 분류한 인터넷내용등급제 즉각 폐지 △동성애를 변태성행위로 규정한 청소년 보호법 즉각 개정 △통신검열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즉각 폐지 등을 요구. 참가단체들은 이와 관련 오는 2일 오후 7시까지 사이트 파업을 진행하며 향후 구체적인 활동들을 벌일 계획.

민교협, 조선일보 구독거부와 언론개혁 촉구

사회 각계각층이 지속적인 언론개혁의 촉구와 조선일보 구독거부를 잇따라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을 선언. 민교협은 30일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격적인 안티조선·언론개혁운동에 나서겠다고. 민교협은 "친일행각과 왜곡보도를 일삼아 온 조선일보를 보는 것은 제자들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다"며 "아울러 사립학교법 개정 운동, 국립대발전계획 반대 운동 등에 대해 반 개혁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전체 보수언론에 대한 개혁 운동에도 동참할 것이다"고 표명. 아울러 △조선일보 기고·취재·인터뷰 거부와 동참 권유 △각종 공론의 장에서 언론개혁 정당성 주장 △개강 이후 학생들과 언론개혁을 주제로 토론 등을 벌일 방침.

또한 민교협은 앞으로 조선일보 구독거부의사를 밝힌 회원들을 집계해 발표할 예정이며 조선일보 각 지면에 대해 전문가의 견지에서 분석·비판한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 아울러 보수언론과 지식인간의 네트워크를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공론화하기로 했다.

티 3차 총회 '사립학교법 개정 특별결의문' 채택

태국 잠티앙에서 열린 티(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 3차 총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특별 결의문이 채택. 지난 25~27일 155개 국가, 330개 조직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티 3차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에는 "사립학교 경영자만이 예산과 회계에 대해 독립적인 결정을 행사할 수 있는 한국에 몇몇 학교는 부패가 만연하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 또 결의문에는 "부패 사학에 항의 시위하다 구속된 2명의 교사를 즉각 석방할 것"을 아울러 요구. 한편 전교조 김지혜(43·여) 부위원장이 총투표자 1,804명 중 1,130명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다른 네 후보를 누르고 티 집행위원으로 당선. 전교조에 따르면 김지혜 부위원장은 아시아지역 집행위원으로 향후 3년간 아시아와 여성교육을 위해 활동.

100인위, 성폭력 가해자 실명공개 명예훼손 아니다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에 의해 성폭력 가해자로 실명이 공개된 박일문씨가 100인위 회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29일 불기소 처분. 검찰은 '공소무제기' 이유를 통해 "100인위에서 발표한 게시물은 운동사회내 성폭력이 심각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고소인 박씨를 비롯한 16명의 명단 및 성폭력 사례를 공개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를 공론화해 성폭력을 예방하려는 의도가 인정된다"고. 이에 따라 성폭력사건과 관련, KBS노조 강철구 전 부위원장이 <미디어오늘>과 <기자협회보>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기사입력날짜 : 2001 년 08 월 06 일

편집실 chamnews@jinbo.net



상세검색 | 기사검색

독자게시판

http://news.jinbo.net

주요 | **진보네트웍스** | **참세상** | **뉴스**

2001년 10월 6일

@ 정보통신/인권하루소식

[논평]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폐지하라!

그들이 근거로 들이대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이란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으로, 그 모호함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기에 이미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출처: 인권하루소식



[논평]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폐지하라!

인터넷 검열의 칼바람이 8월의 무더위 한복판을 가로질러 싸늘한 한파를 일으키고 있다. 올해 들어 누드 작품이 게시된 홈페이지, 자퇴생들의 사이트, 동성애자 카페들이 줄줄이 폐쇄당했다. 얼마 전 500여 진보단체의 홈페이지를 호스팅하고 있는 진보넷 등은 접속 자체를 차단당할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모두 정통윤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16조 불온통신 조항을 들먹이며 시정권고를 했기 때문이다.

차단당한 사이트들은 어떠한 해명의 기회도 없이 표현의 자유와 소통의 기회를 빼앗기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이것은 분명 어떠한 폭력적 게시물보다 폭력적이며, 어떠한 불온정보보다 불온한 조치다.

하지만 그들이 근거로 들이대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이란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으로, 그 모호함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

기에 이미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정통부장관이 위원을 모두 위촉하고, 장관에게 활동내용을 보고하며, '불은통신'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는 정통윤은 자신이 민간자율기구라고 강변한다. 또 시정권고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다고 '친절히' 안내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정통윤의 '시정권고'를 충실히 받아들여 사이트를 폐쇄해왔고, 심지어 '다음'(DAUM)·'세이클럽'(sayclub) 등은 정통윤의 '시정권고'와 상관없이 수많은 동성애자 카페를 차단하기도 했다.

백번 양보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부 장관은 '시정명령'이라는 강제권이 있다. 결국 정통윤의 시정권고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시정명령권이라는 보완장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 정도면 시정권고는 안 지켜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결코 아니다.

결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불은통신의 멧에 걸린다. 정통윤의 심기를 건드리는 인터넷 표현물들은 모두 불은통신이라는 모호한 조항으로 억울 수 있다는 뜻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통윤은 강력한 '검열기관'으로 행세하게 된다. 이와 같이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적 인권위에 군림하는 정통윤은 전혀 쓸모 없는 존재일뿐이다.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거대한 암초가 돼 버린 정통윤은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정통윤을 떠받치고 있는 '불은통신' 조항은 당연히 위헌임을 확인한다. 인터넷 공간에서 폭군이 돼 버린 정통윤을 폐지하는 것이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꽃피우는 출발점이다.

기사입력날짜 : 2001 년 08 월 18 일

편집실 chamnews@jinbo.net



상세검색 | 기사검색

독자게시판

<http://news.jinbo.net>

노동 | 과학 | 정보통신 | 사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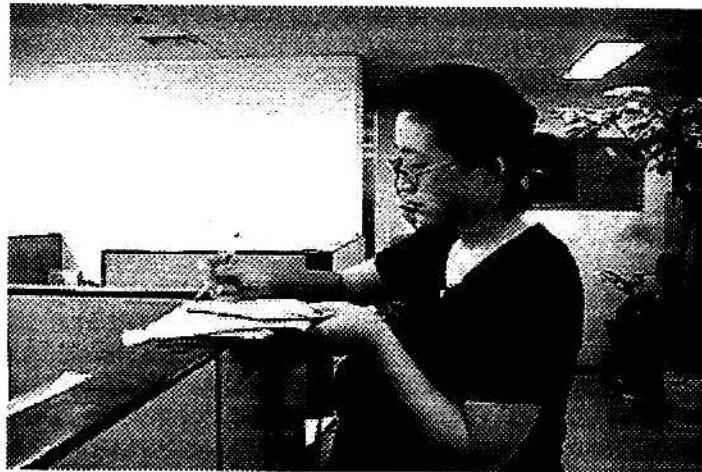
2001년 10월 6일

@ 정보통신/참세상

황당 정보통신 윤리위!!

진보네트워크 센터에서는 이에 대해서 "정당한 결정이었다면 회의록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즉시 이의신청을 제출하는 한편 회의록이 계속 비공개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참세상뉴스



사진은 지난 8월4일 정보통신 윤리위에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하는 진보넷 장영경 정책실장

회의록도 공개 할 수 없다.

지난 8월 2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와 노동네트워크, 학생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전국연합, 통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청년단체협의회등 8개 사회단체 사이트에 올라온 '구국의 소리'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관련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윤리위 앞에서 집회를 갖는 한편 이 결정이 합리적이었는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의를 했던 바 있다. 윤리위는 10일 답변을 통해 자신들의 시정조치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역설하는 한편, 17일 전국연합의 사이트에 올라온 또다른 게시물(명의도용)에 대하여 또다시 IDC, 서버호스팅 업체측에 삭제를 요구하여 개정의 여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지난 6일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이 결정과정의 합리성에 대하여 상당한 의혹을 갖고 윤리위가 8개 단체의 IDC, 회선업체에 삭제 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한 '제27차 회의록'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한 바 있다.

소위 '27차 회의록'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27일,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 왔다.

그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5호(이하 1항5호)"에 의거하여 비공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1항 5호'의 내용은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 센터에서는 이에 대해서 "정당한 결정이었다면 회의록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즉시 이의신청을 제출하는 한편 회의록이 계속 비공개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31일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앞에서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주최로 집회를 갖는다.

기사입력날짜 : 2001 년 08 월 28 일

편집실 chamnews@jinbo.net



상세검색 | 기사검색

독자게시판

http://news.jinbo.net

주요 | **인권 & 정보통신** | 사회 | **국**

2001년 10월 6일

@ 인권/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인권 (2001년 8월)흐름과 쟁점

한국전쟁 당시 노근리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공중폭격을 가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지만, 미국은 여전히 오리발이다.

출처: 인권하루소식

1. 광란의 색깔론에 덧칠당한 '만경대 방명록'

8·15통일대축전에 참가한 강정구 교수의 '만경대 방명록'을 놓고 냉전수구세력들의 '마녀사냥'이 극에 달했다. '만경대 발언'을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로 몰아간 수구집단의 '광기' 속에 급기야 강정구 교수가 구속됐고, 정부는 강 교수 외에도 범민련 관계자 7명을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막걸리보안법의 망령을 여지없이 되살려낸 한 판의 '광란극'이었다.

2. 정보통신윤리위 검열 강화 ... 위축되는 표현의 자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윤)의 인터넷 검열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다음(DAUM), 세이클럽(Say Club)의 동성애자 동호회 등 '불온' 카페가 심심치 않게 폐쇄되더니 급기야 정통윤은 회선사업자에게 특정게시물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통윤은 전농, 전국연합 사이트 등의 회선을 관리, 임대하는 업체에 '구국의 소리' 게시물 삭제를 '요구'(8.2)했고, 이에 따라 전농 등 8개단체 사이트가 잠시 폐쇄(8.3)되기도 했다. 정통윤은 또 5백여 개 사회단체의 웹호스팅을 하고 있는 진보넷에도 '게시물 삭제 요구'라는 형식으로 압력을 가했다. 이에 사회단체들은 정통윤을 인터넷 상의 '검열기관'이라고 비판하며, "정통윤 폐지"를 촉구하는 캠페인에 돌입했다. 한편 인터넷을 통해 음악파일을 공유할 수 있던 '소리바다'가 '저작권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8.12)됨에 따라 정보공유와 저작권을 둘러싼 싸움도 가열될 조짐이다.

3. 인권위 설립 작업 가시화... '밀실 구태' 유감!

34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 연대회의'는 인권위원 후보 10명을 공개추천(8.1)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논의 공론화, 밀실인선 중단'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 대통령 등 인권위원 지명·임명권을 가진 곳으로 보냈다. 한편 청와대는 같은 날, 김창국 변호사를 초대 인권위원장으로 전격 내정했으며,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국가인권위 설립준비 기획단'이 출범해 활동을 시작(8.20)했다. 그러나 인권위원장 내정과 기획단 출범 과정에서 드러난 '밀실' 논의가 인

권단체들의 큰 반발을 샀다.

4. 험난한 과거청산 ... 진상규명·피해구제 아직 멀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대법원에 위자료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다(8.9).

의문사진상규명위는 "고 최종길 교수가 '간첩자백을 했다'는 중앙정보부의 발표는 조작된것"이라고 발표(8.20), 중정의 후신인 국정원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가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97년 김준배 씨 사망사건' 당시 수사검사였던 현직검사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출석요청에 거듭 불응하는 등 국가권력기관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8.23).

5. 아메리카의 후안무치, 그 끝이 없다

주한미군은 "과거 여러 차례 오염토양을 제거"한 사실을 시인(8.10)하면서도, "북사평역 오염기름은 미군기지 것과 다르다"고 발뺌으로 일관(8.16). 이어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한 선언(8.23)을 하기에 이른다. 또 한국전쟁 당시 노근리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공중폭격을 가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지만, 미국은 여전히 오리발이다.

기사입력날짜 : 2001 년 08 월 31 일

편집실 chamnews@jinbo.net

진보네트웍스

참세상 뉴스

http://news.jinbo.net

상세검색 | 기사검색

독자게시판

오늘 | 2001년 10월 26일 | 1월 1주

2001년 10월 6일

@ 정보통신/인권하루소식

정통윤의 음란함을 고발한다!

검열반대 공동행동, 28일 '음란 페스티벌'

출처: 인권하루소식

왜 정통윤을 폐지해야하는지를 알리는 색다른 '페스티벌'이 열린다.

"동성애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퇴폐적이고, 자퇴생들은 모두 불량 청소년이고, 산부인과와 관련된 성 지식이 불건전하며, 정부비판자는 반사회적 빨갱이다"고 보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오히려 '음란'하다고 주장하는 '음란 페스티벌'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

진보넷, 문화연대 등 22개 인권·사회단체가 참가한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검열반대공동행동)이 28일 오후 4시 인사동 서울은행 앞에서 '음란 페스티벌'을 연다. 검열반대공동행동이 2주에 한 번씩 여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 4번째 주제는 '음란'으로, 김인규 웹아트·이반 동호회 삭제·아이노스쿨 폐쇄조처 등 일련의 사건을 통해 드러난 정통윤의 행위가 '음란'한 권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빗댄 말이다.

검열반대공동행동 참가단체인 문화연대, <대자보>가 주관하는 '음란 페스티벌'은 '야시시... 퍼포먼스', '힘을 합쳐 음란물 만들기' 등을 통해 인터넷 정보를 '음란'이라는 추상적 잣대로 재단하는 정통윤의 행위가 검열임을 밝힌다. 페스티벌 문의 : 02-773-7707

기사입력날짜 : 2001년 09월 26일

편집실 chamnews@jinbo.net

글쓰기:공동행동

1.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

7월 1일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된다.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시행 근거가 되는 법률은 지난해 시민사회와 네티즌들로부터 큰 반대를 받았던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다. 서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영리적인 청소년유해매체물만을 대상으로, 정부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시행주체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즉 정부이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자신들 단과 다른 등급이 달려 있거나 등급이 부여되어야 할 대상인데 등급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등급'과 더불어 '제3자 등급제'를 시행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모든 인터넷사이트를 등급제의 대상 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구축하고 있는 해외사이트 차단목록 12만 건은 앞으로 등급제의 기반이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는 음란과는 관련 없는 동성애 운동 사이트까지 포함시켜 놓을 것이다. '영리'에 대한 법적 해석도 무형의 이익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해서 사회단체나 개인 홈페이지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또 서적이나 영화와는 달리 무한대에 가까운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등급제를 시행하려다 보니 등급 판 때는 사람보다 기계(로봇)가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엉뚱하게 차단되는 경우가 속출할 것이다. 토론의 맥락이나 예술적 가치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등급제의 판단 기준도 문제다. 지금 정부가 시행하는 등급제의 기준은 이를테면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비영리인 홈페이지)를 '음란물'로 판정하거나 아이노스쿨(비영리 단체 홈페이지)를 폐쇄하여 논란을 빚고 있는 바로 준들이기 때문이다. 명분상으로는 '청소년보호'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판단 기준은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라 정부가 보기에 청소년에게 유해할 '것 같은' 내용, 즉 지배권력을 불쾌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불온한' 내·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되는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보호법은 전국노동단체연합의 '노동전선' 등 노동·정치·내용들을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동성애를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 왔다. 더구나 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장관이 '불온'하다고 생각하는 통신은 무조건 삭제하고 폐쇄하도록 하여 위원 지적을 받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의 위력이 인터넷내용등급제와 결합한다면 더 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형식적으로는 '자율', '사후심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무거운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배경으로 하는 '정부의 검열'인 것이고 결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더구나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전국의 PC방에는 정보통신윤리의 기준을 따르는 차단소프트웨어가 의무화되는데, 이것이 인터넷내용등급제와 결합한다면 대한민국 영토 인터넷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부의 검열로 죽어갈 것이다.

2.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문제

근대사회가 등장하면서부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절대적 가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 속 표현의 자유는 제한적이었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선언과 별개로, 표현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접할 수 있는 물적 수단은 언론과 권력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비로소 인터넷의 발명 이후 누구나 스스로 국경을 넘나들며 자유롭게 표현하고 출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표현 환경의 변화는 대중미디어가 그랬듯 '표현'과 '문화'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과거에는 편집자에 의해 선택되는 엄격한 사실 정보와 투철한 예술혼만이 '표현'으로 인정되었지만, 이제는부터 직접 생산되는 정보들, 그런만큼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고 가볍고 거친 표현도 제각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날 것 그대로의 표현'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매우 오래 보았던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가 21세기의 최첨단 미디어를 둘러싸고 가장 첨예한 주제가 된 이유는 여기(이) '표현의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도 새삼스럽게, 원론적으로 성찰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국가보안법 체제 하에서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란 허가받은 내용들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었다. 우리는

길들여져 왔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은 정반대이다. 표현의 자유 논쟁은 허가받지 않음에 대한 것들로부터 시작된다. 표현의 자유가 정치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정치적 반대자들에게이다. 충분한 발언력을 확보하고 있는 지배 세력에게 표현의 자유는 그다지 절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니, 그 표현의 자유는 오히려 적대적이다. 지배자들은 정치적 반대자들의 표현을 억압하고 사상을 통제하려 하이다. 한편 표현의 자유가 윤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불쾌한 표현물에 대한 것이다. 논란의 여지 없이 이것들에는 '표현의 자유'가 필요하지 않다. 표현의 자유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아름답지 않은 것들, 불쾌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 얼마나 관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물론 몇년전 군가산점 논란처럼 사회적 약자나에 대한 폭력들까지 표현의 자유란 이름으로 부르고 싶지는 않다. 자유는 차별없는 평등 속에서 비로소 진가를 가지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와 언론은 자살, 폭력, 음란, 언어 습관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남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인터넷에서 찾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인다. 누군가 자살을 하면 자살의 원인을 자살 사이트에서 찾는다. 이 살해를 하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하면 그 소년이 인터넷, 혹은 게임에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하지만 정부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인터넷을 이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진단들은 마치 모두가 텔레비전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과 똑같은 소리다. 매우 무능하며 무책임할뿐더러 문제의 진짜 원인을 듣는다. 하긴 가정이나 사회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보다는 자살 사이트가 갑작스런 영향을 끼쳤다는 진단이 출단해 보인다. 문제의 진단만큼이나 문제의 해결도 손쉬워 보인다. 차단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쉬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해법이다. 정말 청소년 넷 때문에 자살하고 살해하는가? 인터넷을 차단하면 폭력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세상이 올까?

자살사이트 이후 몰아닥친 보수 여론은 진지한 질문조차 봉쇄하면서 현실 사회의 모순을 은폐해 왔다. 정보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경찰과 검찰은 몇 달 동안 인터넷이 '반사회적'이며 '불건전'하고 '불온'하다고 정의를 증명하기 위한 갖가지 극단적인 사례들을 발굴해 냈다. 그들은 이데올로기전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정부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열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들은 또다짐을 이루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옹호가 급속도로 제 목소리를 잃어간 것이다. 이제 표현의 자유는 자살과 같은 사회 문제 해결에 무능하며 무책임한 가치로 치부되고 있다. 그러나 정말로 무능하며 무책임한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위기이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할 수 없는 상황, 그 자체가 우리의 위기를 증거한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우자. 모든 역사적 과정이 그러하듯 표현의 자유 역시 저절로 얻어지지 않는다. 사실상 우리에게 남은 길 밖에 남지 않았다. 6월 29일 사이트파업을 시작으로 인터넷내용등급제가 폐지되는 그날까지, 격렬히 싸우자. 인터넷을 제 입맛대로 죽이려는 자들에게 맞서 우리의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인터넷을 지켜내자.

한겨레

www.hani.co.kr

기사섹션 : 게임

등록 2001.07.15(일) 07:05

온라인게임 올 하반기 등급분류될 듯

PC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만으로 한정됐던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가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온라인게임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게임이 폭력성과 잔혹성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등급분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 관계자는 "온라인게임 시장이 성숙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온라인게임 시장 규모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PC게임과 마찬가지로 등급분류가 필요하다"며 "하반기 중 업체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PC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은 게임 출시전 문화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이용가, 12세, 15세, 18세 이용가 등 4가지 등급으로 분류된 후 판매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온라인게임의 등급심의를 다른 게임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관장하게 될 것"이라며 "PC게임에 준하는 기준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화부의 온라인게임 등급분류가 실행될 경우 각 온라인게임 업체에서는 회원의 실명화 작업을 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18세 이용가로 등급이 분류된 게임은 매출에 치명타를 입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문화부의 이러한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계획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그동안 온라인게임의 심의를 담당했던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측은 "현행법상 통신상의 유통물에 대한 심의 권한은 윤리위에 속한다"며 "현재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계획은 없으며 기존의 방식대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을 통해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 윤리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http://www.hani.co.kr/section-010100006/2001/07/010100006200107150705049.html>

The Internet Hankyoreh copyright(c) webmaster@news.hani.co.kr



등록 목록 삭제 답변 수정

제목 인터넷 언론자유에 위협
내용

역시 좀 오래된 기사지만 퍼왔습니다.
한겨레 6.22

인터넷 언론자유에 위협

언젠가 멕시코 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의 마르코스 부사령관은 게릴라 투쟁과 함께 네트워크를 타고 흐르는 '비트에서 비트로 연결된 조용한 힘의 축적'이 농민들의 국지적 투쟁을 국제적인 정치력으로 비약시켰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만큼 힘없는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사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데이터를 잘게 쪼개 네트워크로 끊이지 않고 흘러보내는 '스트리밍' 기술은 대역폭에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동영상 정보를 구현해 새로운 게릴라 언론의 길을 열었다.

디지털 게릴라방송은 1999년 겨울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그 진가를 발휘했다. '독립미디어센터'(www.indymedia.org)는 당시 시애틀에 모인 노동자·농민·중소기업인·학생들의 시위 소식과 다양한 의견을 알릴 목적으로 400명 이상의 리포터와 시민단체의 제작자들이 모여 만든 인터넷 방송사이트다. 이 센터는 이제 미국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지국을 갖는 범네트워크로 성장했다.

이 센터의 쾌속 성장에는 논의의 개방성과 사건의 현장성이 자리하고 있다. 누구나 노동·인권·환경 문제와 관련된 글·사진·동영상 등의 정보를 올릴 수 있는 평등한 접근권과 정보 자원의 탈집중화가 그것이다. 지난 4월 캐나다 퀘벡에서 미주자유무역지대 결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34개국 정상 모임에서도 이 센터는 게릴라 매체로서의 구실을 톡톡히 해냈다.

그런데 그 자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던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퀘벡의 시위와 집회에 대한 보도를 한창 진행하던 중에, 미 연방수사국과 재무부 산하 비밀감찰국(SS)의 직원이 시애틀의 이 센터에 찾아와 미 법원의 명령서를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명령서는 이 센터의 웹사이트에 정보를 올린 접속 기록을 제출하라는 것과 법원명령에 관련한 모든 내용의 보도금지를 명하는 것을 뼈대로 했다. 혐의에 오른 익명의 두 게시글을 조사하기 위해 48시간 동안 서버에 기록된 125만명의 접속자 명단을 내놓으라는 억지였다. 혐의는 캐나다 경찰이 지냈던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방문 세부일정과 경찰의 시위대 진압에 대한 계획이 유출됐다는 것이다.

지난주 사건은 종결됐다. 사건이 시민단체들의 여론에 오르고 법정 대응이 준비되기 하루 전에 법원은 발빠르게 명령을 철회했다. 혐의도 분명하지 않은 데다 심각한 언론자유 침해라는 여론이 확산돼 승산이 없을 것을 미리 짚었기 때문이다. 여전히 남는 의혹은 캐나다 정부에 대한 수사 협조라는 명목으로 어떻게 미 정부가 자국내의 한 언론을 조사하려는 넓은 아량이 생겼냐는 점이다.

이광석/뉴미디어 평론가Heeks@mail.utexas.edu(www.cybermarx.org)

단체홈페이지

첨부파일

이전◀▶다음

보라! 퇴폐 2등급의 근거를!

차별반대공동행동, 정통윤에 공식사과 요구

진보네트워크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게시물 삭제요구 및 호스팅 업체의 서비스 중단을 요구해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인터넷활동 탄압이 본격화 되고 검열의 칼날이 확대되고 있다.

불건전사이트를 나름대로(?) 등급기준을 정하고 사이트 차단SW를 제공하면서 호스팅업체에 압력을 가하는 등 인터넷사이트 폐쇄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3일 동성애자차별반대공동행동(이하 차별반대공동행동)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 정통윤에 불건전사이트 선정기준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결과 '퇴폐 2등급'으로 규정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몇년동안 76개에 달하는 사이트와 해외동성애자 사이트가 차단SW에 퇴폐2등급으로 공급되어 왔었다"며 정통윤의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얼마전에도 ivancity라는 동성애자 사이트가 폐쇄되었고, 정통윤의 경고를 받아 Daum과 세이클럽등의 인터넷 사업체가 제공하는 동성애 관련 인터넷 카페와 소규모 클럽들의 폐쇄 이유없이 폐쇄되었다고 한다.

즉 사이트 운영자에게는 아무런 경고조치도 없이 해당사이트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호스팅업체에 경고조치하여 사이트가 하나씩 사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차별반대공동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경고조치에 의해 폐쇄된 사이트의 폐쇄근거를 요구"하고 "국제적인 동성애자 사이트와 연대하여 정통윤의 비합리성과 전근대성을 알리는 것", 그리고 "공식적이지 않은 정통윤에 의해 실시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허구성과 실상을 알리는 것"등을 명명했다.

김금희 (manakorea@yahoo.co.kr)
등록일 : 2001년 08월 03일 11시 09분 04초

[뒤로]

이름	<input type="text"/>	E-Mail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value="의견"/>

차별반대공동행동

정통윤에 인터넷 불건전사이트 선정기준

알림
 * 미국 제5AC의 기준을 참고하였음
 * 현재 국내 인터넷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에 공문 통한 100% 선정기준에 따른 일음

등급	1	2	3	4
정통윤 기준	선제 노출	추정 노출	추정 노출	추정 노출
정통윤 기준	선제 노출	추정 노출	추정 노출	추정 노출
정통윤 기준	선제 노출	추정 노출	추정 노출	추정 노출
정통윤 기준	선제 노출	추정 노출	추정 노출	추정 노출
정통윤 기준	선제 노출	추정 노출	추정 노출	추정 노출
정통윤 기준	선제 노출	추정 노출	추정 노출	추정 노출

INP

카피레프트 운동 선구자 리처드 스톨만 MIT교수

미래사회의 올바른 가치추구는 GNU정신

그가 작년 여름에 연세대학교에서 강연을 한다고 해서 멀리 서울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갔다. 1000여석 이상되어 보이는 강연회장은 이시대의 마지막 해커이자 GNU의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그를 만나고자 많은 인파가 빈틈없이 자리를 매꾸고 있었다.

대학교 교수라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히피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평생 빗질을 하지 않은 방퍼짐한 머리와 아무렇게나 자란 수염은 색깔이 검어서 그렇지 산티크로스의 모습과 흡사하기까지 했다.

그런 모습의 리처드 스톨만(51·MIT 대학 컴퓨터공학과 교수)을 우리들은 '카피 레프트의 성자'라고 부른다. 그는 자유 소프트웨어 연합(Free Software Foundation: FSF)을 만들었고 GNU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많은 리눅스의 매니아들의 우상이며 정보공유라는 유행군단을 이끌고 있는 교주이기도하다.



그는 독점과 탐욕의 상징인 MS사의 빌게이츠와 상대적으로 반대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며 정보사회에서의 프로그램은 공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독점되어서는 안된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GNU정신에 의해 적용되는 GPL라이센스의 수많은 프로그램오픈 소스로 말미암아 손쉽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더욱 향상시킬수 있게되었다. 이를 뒤받침하는 증거가 리눅스의 빠른 발전이다.

리처드 스톨만이 일하던 연구소도 연구원들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하였다. 리처드 스톨만이 이를 거부 했지만 혼자 힘으로 이러한 흐름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83년 FSF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는 이 시대에 마지막 남은 진정한 해커라고 불리우며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공개하여왔다. 그가 FSF를 설립하자 돈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뜻밖에 많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GNU의 정신을 지지하는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FSF에 기증했다. 카피라이트에 반대하는 '카피레프트 운동'이 조직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프로그래머를 지향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성서처럼 생각하는 'GNU선언문'에서 스톨만은 '성경에 적혀 있는 것처럼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일을 남에게 하라'고 말한다.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남도 사용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학교에 다닐때 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맛있는 것이 있으면 친구와 나눠먹으라고 배우지 않았던가?

우리는 미래사회에 대한 올바른 가치 추구에 다하여 GNU를 통해서 전달 받고 있다.

임창현 (reds@inp.or.kr)

등록일 : 2001년 08월 03일 23시 38분 50초

[뒤로]

이름	<input type="text"/>	E-Mail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의견

INP



등록 목록 삭제 답변 수정

제목 미 '어린이인터넷보호법' 내년 2월 재판
내용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메일을 보내는군요.
조금 지난 기사이지만 중요한 기사라서 전달합니다.
미국에서 어린이인터넷보호법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야기입니다.
어린이를 보호하려면 인터넷을 때려잡는게 아니라
국제 아동권리조약의 수준에 맞는 오프라인에 대한 법령 정비가
더욱 필요한 거죠.
인터넷에만 따로 적용되는 법은 정부의 행정규제 권한만 강화
시키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미 '어린이인터넷보호법' 내년 2월 재판

어린이 보호냐, 표현의 자유냐?
어린이들의 인터넷 음란사이트 접속 방지를 위해 미국이 지난해 제정한 '어린이
인터넷 보호법안'이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미 플로리다주 제3항소법원은
23일 보호법안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도서관연합회와
시민자유연합, 인터넷사이트 운영자 등을 대표한 36명이 낸 소송에 대해
"검토해봐야 할 많은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며 내년 2월 정식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소송자들은 개인용컴퓨터에 음란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성인들의 정당한 접근을 막고 동성애자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안이 음란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은
학교나 도서관에 연방기금 지원은 물론 인터넷 할인판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까지 금지해 연간 손실액이 2억1500만달러(2795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대표하고 있는 법무부는 이에 대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교육적 목적을 위한 인터넷 접속이 아니라면 보조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반박했다.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1990년대 중반부터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은 97년
음란사이트 접속 차단을 목적으로 한 '통신품위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금지시켰으며, 98년에도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이 제정됐지만 99년 같은
이유로 시행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상록 기자myzodan@hani.co.kr
단체홈페이지
첨부파일

이전◀▶다음



인터넷녹두신문 녹두방송 -VOD 녹두방송 -AOD 만화 About-INP
다락에서꺼낸영상 | 카메라출동 | 지난뉴스영상 | 글 남기기



등록 목록 답변

분야 정보통신
 제목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관한법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첨부파일

내용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관한법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의견서

- 6.11

1.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가. 시행령(안) 제 23조 제2항은 적절하지 않은 규정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나.

첫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법 제42조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위반하는 표시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법 제64조), 그 표시방법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할 것인데, "기호, 부호,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표시방법은 불명확하다.

둘째 위 시행령 제23조 제3항은 위 제23조 제2항의 불명확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다시 정보통신부장관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으나, 위에서 지적했듯이 위 표시방법은 형벌규정의 일부를 이루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그 표시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장관의 고시로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추측컨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를 전자적으로 하도록 하는 이유는 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내용선별소프트웨어에 의해 전자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인터넷의 개방성과 국제성에 비추어 내용선별소프트웨어에 의한 등급제는 다양한 주제에 의해 자율적인 방식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제를 내용선별소프트웨어에 포함시킬 경우 그 범위내에서 강제적인 내용등급제를 시행하는 결과가 되어 바람직하지 않는데다, 국회에서 모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 심의할 때 내용등급제를 채택하지 않은 입법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다.

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에 관하여 시행령(안) 제23조 제1항은 "19세 미만 이용불가"라는 취지를 음성, 문자 또는 영상으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 14조 별표 3(위 시행령(안)에 의해 삭제될 부분)도 전기통신을 이용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으로 "19세미만 이용불가"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 제17조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는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의무가 있으므로, 인터넷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으로는 위 제23조 제1항만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2.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

의견없음

이전 ◀▶ 다음